



한국전쟁 60주년의 교훈과 통일전략

1. 이승만대통령의 통일전략과 과제

(양동안 교수:전.한국학 중앙연구원)

2. 북한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과 통일을 통한 유산청산

(조성훈 박사 :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60주년의 교훈과 통일전략

본 원고는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10년 세미나(2010. 6. 16)에서
발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진화정책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한국선진화정책학회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 창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주창하는 것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국가의 품격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는 억압과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와 함께 통일된 한반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금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무려 1,000회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6.25전쟁에 대해 논하는 것은 6.25전쟁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생존해 있으며, 국군포로는 북한에서 구차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천만 이산가족은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사회의 일부세력들은 6.25전쟁에 대한 많은 억측들을 조작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한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민족통일을 위한 조국해방전쟁이었다.’라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극비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김일성이 주도하고 소련이 적극 지원한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상징조작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와중에 발생한 우발적 민간인 피해 사건들을 미국의 의도적 양민학살사건으로 6.25전쟁의 본질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래서 6.25전쟁에 대한 기원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됩니다. 바로 6.25전쟁은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우리시대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전쟁이 가져온 고난과 폐허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약의 목표는 바로 ‘선진화와 통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와 통일’ 만이 한반도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화와 발전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화와 통일’ 은 우리시대에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국가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은 언제라도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억울한 죽음과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는 전쟁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불할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외국군의 침략을 억제할 능력이 없으면 평화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6.25전쟁도 예외 없이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살상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6.25전쟁의 아픔을 마무리 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화와 통일’ 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희 학회가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한 개최하는 『6.25전쟁 60주년의 교훈과 통일』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절적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6.25전쟁이 남긴 유산과 교훈을 살펴보고 ‘선진화와 통일’ 의 길을 찾아보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6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회장 정 재 영 드림

이승만의 통일정책과 현 단계의 과제

양 동 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해방공간에서의 통일정책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저술가들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추구한 정치노선을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권력욕 때문에 외세의 분할 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를 만들려 한 민족분단추구적(즉, 반통일적) 노선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의 이승만의 해방공간에서의 행동은 오히려 통일지향적이었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항상 단결을 주장하고 민족의 조속한 완전독립(즉, 민족통일)을 추구했다.

이승만의 단결과 완전독립 호소는 해방직후 귀국과 동시에 행해졌다. 이승만은 해방 후 귀국 다음 날인 1945년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뭉치고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자주독립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긴급한 문제는 완전독립이 아닌가. 그러자면 하루 빨리 뭉쳐야 할 줄 안다. 한데 뭉치어 우리 땅을 우리 국가를 찾아 놓고 전 인민의 총선거를 단행하여 새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¹⁾

이승만은 대동단결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반공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공산당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21일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²⁾ 그는 또 1945년 10월 23일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일부 쟁점을 놓고 좌우익 대표들이 의견대립을 보이자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서로서로 악수할 점이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 악수하고 나갑시다” 라고 말했다.³⁾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독촉중협은 출범할 수 있었다.

1) 양우정 편,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서울: 독립정신보급회 출판부, 1948), 93~95.

2) <<매일신보>> 1945. 10. 26.

3) <<매일신보>> 1945. 10. 25.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이러한 발언을 이승만 비판자들은 당시 이승만이 책략적으로 한 진실성이 담기지 않은 말로 치부한다. 그러나 이승만이 공산주의의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사실은 6·25전쟁으로 북한 공산군에 큰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인 1951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승만은 그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도 또한 혁명적 사상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주창하는 바는 자기들도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운다 하며 또 선언하기를 자기들은 민주주의보다 한층 더 나가서 다만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도 보장한다 합니다. …이론상으로 말하면 나도 이 주의를 옳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주의를 주의대로 전파하면 나도 그분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4)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표방하는 목적에는 호감을 가지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재를 하고 전쟁을 통해 세계적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이승만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처럼 단결과 완전독립을 위해 공산주의에 대해서까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이고 민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은 1945년 11월 4일 이승만이 주도하여 작성한 독촉중협의 연합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담겨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 조선을 마치 양단된 몸과 같이 양단한 것은 우리가 자취한 바가 아니요, 귀 열국이 강행한 것을 이에 선명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카이로 선언에 발표한 모든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 민족적 생활을 통일로써 조직하는 기회가 허여되기를 이에 단연코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임시 정부가 연합국의 승인하에 환도하면 1년 이내에 국민선거를 단행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허여하기를 요구한다.” 5)

당시 조선공산당은 이승만의 이런 자주적 주장이 연합국(특히 소련)에 대해 불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 시종일관 민족자주와 민의존중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속한 완전독립·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자기의 직계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국민운동단체의 명칭도 ‘민족통일총본부’였다. 민족통일총본부는

4)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1(서울: 공보처, 1953), 59쪽.

5) <<자유신문>> 1945. 11. 3.

1946년 6월 29일 결성되었으며,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광복대업을 완성하기에 민족통일이 최고로 필요한 것이니 현 시국의 정세에 총 민의의 요망을 순응하여 민족통일총본부를 성립하고 차로써 대한민족이 다시 통일함을 자에 선언한다. 본부의 주의를 다음과 같다. 안으로는 동족단결을 장려하여 파당적 구별이나 분열적 행동이 없기를 공도하며 밖으로는 연합우방들과 협동공작을 취하여 대업을 속성함. 금후부터는 모든 정당이나 단체가 다 전 민족의 공의를 존중하여 통일전선을 장애나 방해하는 폐가 없기를 기대한다.”⁶⁾

이승만 비판자들은 이승만의 이러한 통일에 관한 말들은 진실성이 결여된 책략적 발언들이며, 그의 본심은 남한에서 선거를 통한 단독정부를 조속히 수립하여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한반도 정세와 이승만이 말하는 남한 정부수립 목적에 비추어보면 타당성을 상실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단독정권을 만든 다음 북한지역을 급속하게 공산화(정확히는 인민민주주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북한지역의 공산화가 정착되면 그것을 토대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계획(북조선민주기지론)을 추진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정국주도 세력도 없고 남한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방향 정립도 없이 분열과 혼란 속에서 대책없는 표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남북한의 상황을 방치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 결과는 공산화통일이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통일을 원하지만 공산화통일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공산화통일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남한의 표류상태를 정돈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남한에서의 신속한 정부수립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승만의 남한정부수립론의 취지가 그러했다는 점은 그 자신의 주장과 설명을 들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이승만은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무성에 제출한 한국문제 해결에 관한 건의서에서 “남북 조선이 통일되고 뒤이어 남북 총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조선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할 과도정부가 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남조선지역의 과도정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미-소의 직접 협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점령 및 기타 중요문제들에 관해 미국 및 소련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⁷⁾

6) <<서울신문>> 1946. 6. 30.

7) Rober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1960), p.232

유엔 소총회가 유엔위원단의 선거감시활동이 가능한 지역(곤, 남한 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의한 직후인 1948년의 3·1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남한정부수립을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다 선명하게 설명했다.

“단독정부라는 말은 당초에 누가 만들어낸 말 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거의 일년반 전에 미주에서 돌아와서 문자와 언론으로 성명한 것은 과도정부로 남쪽을 대표한 정부를 수립하기로 한 것인데,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독정부라는 언론을 만들어내서 인심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들은 총선거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았다가 공산화하고 말자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정부수립이 되면 남북분열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으로 남북이 병행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를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사리에 당치도 않는 말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는 편을 살리기를 피할 것인데 다른 방책이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8)

이상과 같이 볼 때, 이승만의 남한정부수립론은 공산화통일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승만의 이러한 입장은 공산화통일을 회구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반통일적인 것이나, 자유민주적 통일을 회구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지향적인 것이다. 유엔이 1947년 11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한반도통일을 결의한 후 이승만은 그 유엔 결의를 자신의 통일정책으로 삼았다. 유엔결의가 이전부터 천명해온 자신의 통일방안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2. 건국 이후 6·25전쟁 발발 전 기간의 통일정책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대통령 이승만은 남북총선에 의한 통일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했다. 다만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대로 자유총선이 실시되었으므로, 통일정부의 구성은 5·10선거 때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지역에 배정한 국회의원 1백 명을 북한에서 자유총선을 통해 선출하여 기존의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시킨 후 그 합동국회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으로 다소 수정되었다. 이것을 통상 북한지역보충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북한지역보충선거 통일방안은 1948년 12월 19일 제헌의회 제1회 회의 폐회식에서 행한 이승만의 발언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이승만은 “남북통일문제인데 불일내로 유엔위

8) <<동아일보>> 1948. 3. 2.

원단이 래도하여 우리를 원조할 것을 믿으나 우리의 과업은 하루빨리 이북에도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백여명의 국회의원을 보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⁹⁾

북한지역보충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6·25전쟁 발발 전까지 이승만이 통일에 관한 발언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전선이 남북총선실시를 제안해오자, 1949년 7월 10일 그러한 제안을 북한의 ‘상투적인 기만이며 선전’으로 치부하면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승인될만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엔감시하나 그와 같은 기관의 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⁰⁾ 이승만은 1949년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북 공산도배’ 중에서도 악질 반란분자만 제외하고 전부 포섭해야 할 것이며, 통일은 유엔과 협조하여 공론의 순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¹¹⁾ 이승만은 1949년 11월 26일 외국기자와의 회견에서도 “소련이 평화에 대한 그들의 의도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소련당국은 한국인 공산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괴뢰정권을 해체하고 유엔 한위를 초청하여 그 감시하에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¹²⁾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들은 북한지역보충선거에 의한 남북통일이 이승만정권의 통일방안이었음을 거듭해서 확인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이 북진통일이었거나 북한지역보충선거론과 북진통일론이 병행하는 이중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언급한 발언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이승만의 북진통일 관련 발언으로 인용되는 것은 이승만이 그의 미국인 고문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나 담화 및 외국기자들과의 회견 등에 내포되어 있다.

이승만은 올리버에게 보낸 1949년 2월 12일자 서한에서 “만일 허용되기만 한다면 당장 [북으로] 넘어가서 파괴분자들을 벌하고 즉시에 질서와 평화를 확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국친구들이 국제전쟁으로 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동포를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의 변하기 쉬운 정견없는 정책을 따른다면 한국은 조만간 또 하나의 중국처럼 밀어붙여질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¹³⁾

9) 『담화집』1, 11쪽.

10) 위의 책, 22쪽.

11) <<서울신문>> 1949. 10. 14.

12) <<서울신문>> 1949. 11. 27.

13) Rober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Panmun Book Co., 1979), pp.222~223<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서울: 나남, 1996), 595쪽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1949년 가을부터 무력에 의한 북한공산정권 타도론을 보다 자주 개진했다. 이승만은 1949년 9월 30일 외국기자와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 공산정권을 타도할 것을 익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개시한다면 유엔은 이에 항의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실지를 회복할 수 있으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들이 소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여사한 조치는 늦으면 늦을수록 곤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시간적 여유는 공산주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북한동포들은 우리가 공산당을 타도하고 한국의 자연적 국경을 유지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철의 장막을 설치하는데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승만은 49년 10월 7일 미국 UP통신과의 회견에서도 “우리는 3일 내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는 이유는…유엔과 미국이 우리가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참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¹⁵⁾ 이때부터 ‘3일내 평양 점령’이란 허풍은 정부 고위층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승만은 비슷한 시기에 주한미국대사 무초와의 대담에서도 “현재의 참을 수 없는 분단 상태는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며 필요하다면 무력에 의해 통일할 준비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북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¹⁶⁾

그러나 이상의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그 발언들이 북진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그것의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 발언들의 정확한 취지는 ‘우리가 북진통일을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이 시기에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통일정책으로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

1948년 말부터 심각해진 중국내란에서의 공산군의 우세를 보면서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공격이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했고, 가능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한 북진통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이 북진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진통일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던 시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남한의 군사력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고백했다. 이승만은 올리버에게 보낸 1949년 10월 24일자 서한에서 국군의 열악한 무장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14) <<서울신문>> 1949. 10. 1.

15) <<서울신문>> 1949. 10. 8.

16) 박명립, 앞의 책, 610쪽.

“우리의 최근 비밀보고들은 추수가 시작되는 대로 항공기는 물론 기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내려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탄약이 지탱할 수 있는 기간이 2일, 또는 2개월이라는 뜻은 각 사단이 각기 다른 시간에 싸운다면 두 달이 되고 전체 사단이 한꺼번에 싸운다면 이틀이 된다는 뜻의 논쟁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¹⁷⁾

이승만은 한 달 뒤에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우리 육군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5일 이상을 견디기 어려운 탄약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¹⁸⁾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올리버로 하여금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무기지원 로비를 전개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빈약한 무장에 대한 엄살이 섞인 것이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런 서한들은 이승만이 국군의 빈약한 무장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국군의 열악한 무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이승만이 남한의 패배를 초래할 무력에 의한 북진을 통일정책으로 취했을 리 없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28일 공산군이 우세해지고 있는 중국사태를 우려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나는 이북 자체의 애국적 요소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북 공산군도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나가고 있음으로 그들이 이북동포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일어날 것을 믿는 바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남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남한 국군이 북벌해서 통일하게 된다는 것 같은 남북충돌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¹⁹⁾ 이것이 이승만의 본심이었다.

실제로 6·25전쟁 전에는 이승만의 담화나 정부문서에서 ‘실지회복’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북진통일’이란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 실지회복의 방법도 무력행사보다는 북한지역보충선거에 비중을 더 많이 둔 것이었다. 이승만이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분명하게 주장한 것은 6·25전쟁 발발 후의 일이다.

17) Oliver, op. cit.(1979), pp. 259~260<박명림, 앞의 책, 614에서 재인용>

18) Ibid., p. 260<박명림, 앞의 책, 614~615에서 재인용>

19) 『담화집』 1, 18쪽.

3. 6·25전쟁 기간 중의 통일정책

이승만은 6·25전쟁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북한군에 대한 반격이 성공하면서부터 북진통일과 멸공 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950년 9월 20일 유엔군 인천상륙 경축 군중대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북진통일론을 천명했다.

“[아군] 조금도 퇴보 없이 전진하고 있으므로 적군이 불원간 다 전멸될 것이요 우리가 하로라도 빨리 적을 물리치고 이북까지 올라가므로 다 통일해서 우리 강토 안에 적병은 하나도 없이 만들고… 우리 한국이 동양에 있어서 우수한 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대세가 기울어져서 소련공산 군들이 세계에 애소하여 평화적 해결을 하고저 한다. 이것은 다 쓸데없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38선에 가서 정지할 리도 없고 또 정지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이북 공산도배를 소탕하고 38선을 두만강 압록강까지 밀고 가서 철의 장막을 쳐부실 것이니 그런 뒤에는 우리를 침손할 자가 없을 것이다.”²⁰⁾

그러나 아군의 우세를 배경으로 한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은 중공군의 개입과 미국의 휴전협상에 막혀 좌절될 운명에 놓였다. 이에 이승만은 1950년 12월 초 강대국들 간에 휴전협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반발하여 “공산주의자는 과거에 있어서 구두로나 성문으로 된 국제협약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만약 우리가 타협한다면 이러한 합의에 그들이 약속을 지킬는지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²¹⁾ 타협에 의한 휴전에 반대하고 북진통일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선이 38선 근처에 이르는 선에서 전투행위를 멈추려는 휴전협상이 본격화 되자 이승만은 1951년 3월 ‘공산주의자와는 함께 살수 없다’, ‘남북 전민족으로 한 뭉치가 되어서 공산을 다 타도시켜야만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²²⁾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군중시위를 선동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우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하기 싫어서’, ‘무책임하게’ 공산군과 휴전을 하려는 미국에 대해 반발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38선문제이다. 선의를 가진 다수 인사가 유엔군이 38선에 도달하였는데 전투를 정치하라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유엔군은 반드시 북진하여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있는 한국과 만주간의 자연적 경계선까지 진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진실한 벗이라면 공산주의의 진실한 적이라면 결코 이 전쟁이 최후목적인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완수하고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기 전에는 어디서든지

20) 『담화집』1, 39~40쪽.

21) 위의 책, 45쪽.

22) 위의 책, 47~48쪽.

간에 정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²³⁾

이승만은 또 한국에게 휴전협정 수용을 강요하는 미국에 반발하여 국군의 독자 복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산을 우리나라 안에서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방의 도움을 받거나 못받거나 다 막론하고 이를 반대할 것이요 우리가 국토를 회복해서 자유권을 가진다는데는 누구나 우리 앞을 막지 못할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자 한다.” 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민중은 더욱 결심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니 친구가 와서 도우는 것은 감사하나 어디까지나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로만 여기지 말고 앞에 태산 같은 장애가 오드래도 우리가 주저없이 일제히 일어나서 밀고 올라갈 것을 맹서해야 할 것” 이라며 휴전협상 반대 대중투쟁을 더욱 노골적으로 선동했다.²⁴⁾ 이승만은 또 휴전협정을 체결하려면 차라리 중공군과 유엔군이 동시에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국전쟁 처리문제를 남북한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만이라도 싸움을 계속할 기회를 달라’ 고 주장했다.

휴전협정의 체결이 임박하자, 이승만은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주면 휴전에 동의해주겠다고 버텼다. 또한 휴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53년 4월 하순에는 협정서명에 참여하라는 미국 측의 권유를 △중공군을 북한에서 전면 철수시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 △인도군이 남한에 파견되어 반공포로들을 인도해가도록 한 협정문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들을 석방해버렸다.

이승만 비판자들은 이승만의 이러한 휴전반대-북진통일 노선을 민족상잔 전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공산군의 남침으로 민족상잔 전쟁이 전개된 상황에서 그런 민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족상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섬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승만이 6·25전쟁 기간중에 휴전반대-북진통일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지도 반민족이지도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독자적 군사력만으로는 거의 영원히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을 것이며, 유엔군의 총군사력이 적군보다 우세한 조건에서는 그 유엔군의 힘을 빌어 민족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기도 했다.

23) 위의 책, 50~51쪽.

24) 위의 책, 52~53쪽.

북진통일은 당시 전쟁이 통일과 평화정책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실한 소원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북진통일을 다 이루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당한 후 강대국들의 거래에 의해 휴전협정이 체결되려 하자 북진통일이 실패한 것을 아쉬워했다. 당시 전개되었던 전국적 휴전반대 군중시위는 이승만 정부의 동원도 작용했지만 통일과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소망도 작용했던 것이다. 당시 휴전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죽어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당시 국민들은 유엔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믿었고, 그 우세한 군사력을 사용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데 유엔군들이 더 이상 싸움하기 싫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하긴 했지만,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북진통일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북한이 공격해오면 방어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전쟁초기에 미군에 넘겨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전에 동의하는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줄 것을 미국에 끈질기게 요구한 데서 확인된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진통일을 감행하려면 작전지휘권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심으로는 독자적 북진통일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미국이 기피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은 북한공산군이 다시 공격해올 때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휴전반대-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계산된 떼쓰기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에 필요한 많은 것을 얻어냈다.

4. 휴전 후의 통일정책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는 통일문제에 관하여 기개와 정책, 책략적 선전과 공식적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멸공통일이나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기개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 혹은 북한지역 보충선거를 유지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으로 회귀했다.

1954년 4월부터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담인 제네바회담(한국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25전쟁 유관국 외상들이 모인 회담)이 개최되자 이승만 정부는 그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회담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이전부터 협정체결 후 한국문제를 국제 정치회담에서 해결하기로 한다는 미국 영국 등의 주장에 대해 ‘전쟁 마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회담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일축해왔다. 그러나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자 그 회담에 참여하여 통일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승만 정부는 제네바회담에서 6·25전쟁 전에 취했던 통일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이승만 정부의 변영태 외무장관이 그 회담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자유선거가…유엔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자유선거가 불가능하였던 이북지역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④선거 전후를 통하여 전 선거 지역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 조건을 시찰할 유엔 감시위원 및 직원들의 행동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지방행정 당국은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⑤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며 일반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보장받는다. ⑥선거는 비밀투표와 보편적 성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⑦전 한국 입법 대의원의 선출은 전 한국의 인구 비례에 의한다. …⑨선거 실시 직후 전 한국 입법부를 서울에서 소집한다. ⑩다음 사항은 전 한국 입법기관이 설치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가.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할 것이냐의 여부. 나. 현존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여부. 다. 군대의 무장해제.”²⁵⁾

이러한 통일방안은 북한지역보충선거론에서 남북한 동시선거로 다소 양보한 점이 있으나, 기본은 6·25전쟁 전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이승만 정부만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당시의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모두 합의한 통일방안이었다. 그 통일방안에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모두 합의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회가 이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거듭 채택했다는 점에 의해 확인된다.²⁶⁾

휴전 후에도 이승만이나 군부지휘관 및 기타 정치인들이 종종 북진통일을 말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은 1959년 6월 6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미국병력의 원조 없이도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할 수 있다. 한국을 통일하는 유일한 길은 무력행사뿐이다. 미국과 유엔의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북한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을 통

25)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71~73쪽.

26) 위의 책, 74쪽.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²⁷⁾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통일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북한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토의 통일과업을 달성한다” 고 천명하고 있으며,²⁸⁾ 이승만 정부의 외무부도 제네바회담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승만과 그의 정부 구성원들이 간헐적으로 북진통일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될 때까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북한지역보충선거 포함)에 의한 통일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5. 이승만의 통일정책 평가와 현 단계의 과제

흔히 이승만은 분단지향적이었고 그의 통일정책은 반평화적 통일정책이었다고 비판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이승만은 통일지향적이었고 그의 통일정책은 평화적인 통일정책이었다. 이승만이 지향하는 통일은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공산통일이나, 중도파들이 주장하는 중립적 통일과 다른 자유민주통일이었다. 이승만의 평화적 통일정책은 자유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조봉암-진보당의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공산정권과 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승만의 통일정책이 각 시기에 있어서 조건에 부합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취한 통일정책, 즉 남한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이 단독정권을 만들고 그를 통해 북한지역 공산화를 위한 변혁조치들을 집행하고 장차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비공산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정책이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6·25전쟁 발발까지의 시기에 이승만이 취한 통일정책, 즉 북한지역보충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북한공산정권이 남한을 무력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남한에서 중북좌익

27) 국토통일원 편, 『남북대화 사료집』제1권(서울: 국토통일원, 1987), 198쪽<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서울: 박영사, 1997), 19~20쪽에서 재인용.>

28) 우남전기편찬회, 『우남노선』(서울: 명세당, 1959), 167~168쪽.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당시의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비공산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이었다. 그런 조건에서 남북한 동시 자유총선을 실시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컸다.

6·25전쟁 기간 중의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은 북한공산군이 남침을 해왔다가 아군의 반격을 받아 퇴각하고 유엔군의 총 군사력이 공산 측 동맹의 총 군사력보다 우세한 당시의 조건에서는 자유민주적 남북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이었다. 6·25전쟁은 북한이 공산화통일을 위해 도발한 전쟁이었으나 미군의 개입이 시작된 후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까지는 물론이고 향후 상당히 먼 미래까지도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은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 반발하면서까지 북진통일을 추구했던 것이다.

휴전 후 1960년 정권붕괴까지의 시기에 이승만의 통일정책도 당시의 조건에 부합했다.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적대성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리고 남북한의 내부 체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북한 총선실시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협상을 전개했다면 그 협상은 제네바회담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갈등의 해결은 우선 말의 담판(협상)을 통해서 모색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실력대결의 싸움(전쟁)으로 결판을 내는 것인데, 싸움으로 결판내지 못한 남북통일을 말의 담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치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미래를 생각하는 보완적 조치들을 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5전쟁 기간 중 북진통일정책을 취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으나 휴전협정체결 단계에서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서의 불리를 계산하지 못한 실수였다. 휴전에 반대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휴전협정의 체결이 불가항력적으로 된 단계에서는 교전당사국의 입장에서 휴전협정 서명에는 참여했어야 옳다. 휴전협정 서명에 불참하는 것이 초래할 미래의 불이익에 대한 계산을 못했던 것이다. 또 휴전 후 1950년대 중반부터 미래에 있어서 북한과의 공존이 불가피하게 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이 비등하고 그 배후의 동맹세력의 전쟁수행능력도 비등한 상태에서는 남북한은 적대적이건 평화적이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공존에 대비한 보완적 조치들이 필요했다. 예를 들자면, 적대적 공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도를 휴전선에서 보다

먼 거리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도외시되었다.

둘째는 다른 분야에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국 직후에는 군사 분야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월하거나 적어도 비등해야 대한민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통일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힘이 북한보다 약하면 언젠가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통일정책에 대한 군사 분야의 지원이 빈약했기 때문에 6·25전쟁 초기에 북한의 통일방안이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될 뻔 했었다. 휴전 후에는 경제 분야에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와 독재적 통치에서 발휘되는 효과적인 노동력 동원으로 인해 전후 경제복구를 고속도로 이룩했다. 그에 반해 남한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원조, 부패, 비효율적인 노동력 동원 등으로 인해 전후 경제복구가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상당 기간 경제력 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 남한의 열등한 경제력은 남한의 통일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약화시켰고, 반면에 북한의 우월한 경제력은 북한의 통일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1950년 후반 이후 선전과 공작 면에서 북한의 통일정책 추진력이 남한을 압도했다.

셋째는 실력이 밑받침 되지 않은 허세적 공격 선전이다. 6·25전쟁 전이나 휴전 후의 북진통일 선전은 대한민국에 피해를 초래했다. 우선 그러한 허풍은 북한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독재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방어력을 공고히 하는 명분으로 역이용 당했다. 북한 집권세력은 남한의 북진통일 선전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북진통일을 막기 위한 각종 노력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보다 용이하게 동원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용이하게 탄압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북한은 평화통일공세로 남한의 방어태세를 이완시키고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분열시켰다. 또한 북진통일 허풍은 남한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 6·25전에는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여 그에 대한 국민적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6·25후에는 국가안전을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국민적 노력을 전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허세적 북진통일 선전으로 인해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전제로 한 건전한 평화에 대한 연구조차 억압되었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 단계에 있어서의 통일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제기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경우, 이승만의 통일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고 부정적 측면을 반성·회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의 긍정적 측면은 각 시기에 있어서 조건에 부합한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정립·실천이다. 그러한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의 과제의 하나인데, 그 과제를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에 부합하지 않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을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으로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는 냉전단계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데 김·노정권은 냉전단계의 끝자락 혹은 탈냉전 단계의 상황이나 부합한 통일정책을 정립·실천했다. 이런 현상은 김영삼 정권의 일부 기간에서도 나타났지만 김·노정권 10년 동안에 현저했다. 냉전단계의 중심부에서 냉전의 마지막 단계(이완단계)로 이동하려면 대처하고 있는 쌍방 간의 적대성 완화와 공격력 감축이 최급선무이다. 그러나 김·노정권은 그것을 무시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을 정립·실천했다. 객관적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통일정책은 개방국가인 대한민국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폐쇄국가인 북한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남한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하고, 남한의 반체제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남한 사회 내에 북한정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인구를 확대했다. 또 그러한 잘못된 통일정책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 방어태세가 이완되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객관적 정세에 부합하지 않은 김·노정권 시기의 통일정책을 객관적 정세에 부합한 통일정책으로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정노력은 북한정권과 남한 내의 반체제세력 및 북한정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그 노력의 방향도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반성·회피하는 과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보완적 조치의 결여, 다른 분야에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의 결여, 허세적 구두선전 등 모든 항목에서 다 제기된다. 우선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에 부합한 통일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승만 통일정책의 부정적 측면의 반성·회피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곽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

첫째, 미래를 생각하는 보완적 조치 결여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상적 무장에 대한 노력 결여를 들 수 있다. 남북한관계가 냉전단계에 있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평화단계로 접어들 때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애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애호 사상으로 무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 언론계, 사회과학계, 문화예술계에서 활약하는 좌익·좌경세력이 그런 활동의 중심에 있다.

둘째, 다른 분야에서의 통일정책 지원 결여 항목에서는 군사적 방어태세 강화 노력 부족, 그리고 북한정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남한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군사적 방어태세의 강화 노력 부족은 천안함 피침사건과 그에 대한 군부의 부적절한 대응, 및 군장병과 국민들의 히스테리컬한 전쟁 공포증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으니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 북한정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남한 인구의 증가는 전적으로 감노 정권의 부적절한 통일정책의 산물이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투자한 남한의 기업가들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확대로부터 북한정권과 동일하게 이익을 보고, 교류협력의 축소로부터 북한정권과 동일하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한 사회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북한정권과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셋째, 허세적 구두선전의 항목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천명한 ‘단호한 응징’ 선전이나 휴전선에서의 대북방송심리전방송 재개 계획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어뢰로 얻어맞은 것을 말로 복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대한 실질적 응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주먹으로 얻어맞고 말로 응징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응징이 될 수 없다) 북한의 대남 행패확대에 역이용될 수 있다.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것보다는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며, 더욱 올바른 응징은 아무런 구두선전을 하지 말고 비밀 군사작전을 통해 누가 가한지도 모르게 북한군에 대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된다면, 차라리 남한 사회의 전쟁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응징조치가 될 것이다. 실력이 밑받침되지 않은 구두선전으로서의 ‘단호한 응징’은 이승만 정부 때의 실력이 밑받침 되지 않은 북진통일 선전과 마찬가지로 북에는 이익을 주고 남한에는 피해를 주는 것이다.

「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조 성 훈(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학박사)

목 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6.25전쟁 기원과 책임론
3. 전후 미국의 전쟁책동론
4. 전쟁 유산 청산과 불가침협정
5. 맺음말

1. 문제 제기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남북한 사이의 분단을 더욱 고착시켰고, 오늘날까지도 서로 적대의식을 조장하였다. 금년은 전쟁발발 60주년으로, 그동안 남북한이 미해결한 전쟁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진전을 도모할 시기였으나, 북핵문제에 이어 천안함 사태로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과 퇴군을 앞장에 내세워 조선인민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는 주장을 전쟁당시 북한 주민을 동원할 때나 전후에도 줄곧 교육을 시켜왔다. 한 탈북자는 “어릴 때부터 6.25전쟁이 ‘북침전쟁’ 이었다는 반미선전을 지겹게 들어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역사관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의식의 통일은 어렵다” .¹⁾ 고 지적했다.

6.25전쟁에 대한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관점 차이는 다른 대결적 요소와 함께 남북 교류와 협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다행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의 적대의식을 극복

1) 한영진(평양출신, 2002년 입국), 「유치원부터 ‘반미’ 교육… 귀에 못 박혀」, 2006.6.2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4158>.

하고 통일을 도모하려는 일환으로, 한반도에서는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통사』, 『조선전사』 등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²⁾ 휴전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 전후 피랍자를 포함한 납북자 문제 등은 실태파악과 함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었고,³⁾ 통일방안과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다수의 논저가 있다.⁴⁾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 기원, 전쟁의 성격, 승리한 전쟁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전쟁으로 비롯된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불가침협정의 체결 등 전쟁유산을 청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 북한의 전쟁기원과 승리론

6.25전쟁 중 “제가 군인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총을 겨눌 명분도 의무도 느낄 수 없었다”는 한 북한군의 병사의 일기에서는 이념이나 적개심 같은 문구는 비치지도 않고 다만 가족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였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끝내 전사한 휘문중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일기에서도 “남북한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총을 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유혈로써만 달성된다는 철칙은 어디에 있는가”⁵⁾하고 반문한 것처럼, 전쟁 이전에는 남북한의 적대 감정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적대 의식과 피해의식이 구체화되고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휴전 후에도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2) 김정배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안병우·도진순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 한길사, 1990.

3)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한반도 군비통제』 43, 2008.6; 배경식, 「남한지역에서의 북한의 전시동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2; 김명호, 「6·25 전쟁 납북자의 납북동기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2006 가을; 윤여상,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37, 2002년 상반기호 등.

4) 정용석, 「‘불가침선언’과 남북한 갈등구조」, 『통일문제연구』; 박진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국방연구』 51, 2008;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18-2, 2009;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푸른나무, 2007.

5) 『6.25전쟁 북한군 병사수첩』, 군사편찬연구소, 2001; 박남식, 「한 지식인 출신 국군의무병이 온 몸으로 체험한 6.25일기」, 『월간중앙』 1999.7, 422쪽, 429쪽.

이어지면서 서로 심리적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확대시켰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면이나 장비 면에서 우위를 보였으므로 무력통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군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지휘관들은 대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북침론을 내세우는 등 남한과 크게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첫째, 한국전쟁의 기원을 두고 국내 요인들과 대외 요인들의 영향, 혹은 상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전통주의적 인식과 오히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수정주의적 시각이 서로 대립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과 협력 하에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김일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스탈린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그의 통일야욕이 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⁶⁾

그러나 북한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도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전쟁전 김일성은 미국과 이승만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이 엄중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쇄하고 남한인민들을 식민지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토완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민주기지를 강화하면서 남한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세력을 반대하는 대중적 항쟁과 인민유격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⁷⁾ 이렇게 국토완정론을 내세웠으면서도 김일성은 “조선인민은 이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애국 민주역량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하여 가능한 온갖 대책을 추진해왔다”⁸⁾고 위장된 평화를 내세웠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김일성은 “이승만 도당과 괴뢰군대는 오늘 이른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고 북한 내각비상회의에서 보고하면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할 것으로 강조했다.⁹⁾ 26일에는 북한인민이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0-3, 1996.12; 김남균, 「한국전쟁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해외 한국학평론』 2, 36면.

7) 「현정세와 경비대의 과업」(내무성 경비대군관회의에 한 연설) 1950.3.14, 김일성, 『우리당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2면.

8) 「모든 것은 전선으로」 1950.8.15, 김일성, 『우리당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82면.

9)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 1950.6.25, 김일성, 『우리당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0-63면.

하고 이승만은 인민을 반대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했다”¹⁰⁾고 방송하면서 이승만에게 전쟁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튿날인 27일 조선로동당,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승만은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도발했다고 역설하였다.¹¹⁾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을 맞이하여 북한 주민에게 방송연설을 하면서 김일성은 유엔군사령관을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수로 한 무력 침범군 대표”로 규정했고,¹²⁾ 공산 측은 휴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미 3년 전 누가 침략을 시작했는지 증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¹³⁾ 휴전 후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괴뢰군을 앞장에 내세워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¹⁴⁾는 주장에서 점차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미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¹⁵⁾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미제는 끝끝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침략전쟁을 일으켰다.”¹⁶⁾고 미국을 강조했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전쟁 당시 북한주민을 동원할 때나 전후에도 줄곧 교육을 시켜왔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6.25전쟁이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이었다는 반미선전을 지겹게 들어왔다면, “북한의 6.25 전쟁 교육은 철두철미 반제반미 계급교양”이라고 기억했다.¹⁷⁾

둘째, 전쟁 성격에 대해서는 민족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내각비상회의를 열고,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대적으로 야한다”¹⁸⁾고 명령하면서, 부정의한 침략전쟁을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둔갑시켰다.¹⁹⁾ 이후 북한에서는 “조선인민이 수행하는 전쟁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10)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950.6.26, 김일성, 『우리당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5-67면.

11)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2, 1976, 69면.

12) 『로동신문』1953.7.28.

13) 『중국 주재 소련 대리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전문』 1953.7.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782면.

14)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2, 219면.

15)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사회과학출판사, 1983, 4면, 7면.

16) 김혜련 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104면.

17) 한영진, 「유치원부터 ‘반미’ 교육… 귀에 못 박혀」, 2006.6.2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4158>.

18)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94면.

19)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25면.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었다. 그것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세력의 연합세력을 반대한 치열한 반제반미투쟁이었으며,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보위하며 세계혁명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20) 고 평가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인민군은 “미국 침략자들과 이승만 도당을 격파 분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동 및 세계평화 유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 ‘정의의 군대’ 라고21) 치켜세웠다.

이러한 정의의 전쟁론은 중국군의 개입도 정당화되면서 동북지역에 거주하였던 조선족 들의 적극적 참전동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해림구 홍성촌에 청년단 사업을 하고 있던 장덕호는 “6월 25일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 유선방송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리승만괴뢰도당을 부추켜 도발한 조선에 대한 공공공연한 침략전쟁이 일어났다” 는 보도를 듣고,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노예생활에서 갓은 수모와 압박 착취를 받을 받아왔는데 이제 또 미국제국주의의 침략을 받는다면 민족존망이 걸려있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치가 떨려 밤을 뜯눈으로 새우고” 이튿날 즉시 현으로 가서 전쟁에 참가할 결심을 제출했다.22) 동북군정대를 마친 조선족 군간부들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시초가 한반도에서 자주적인 독립,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내전이 라고23) 평가했다.

북한 정부는 1970년 7월 친공적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통해 6.25전쟁이 ‘미제의 북침전쟁’ 이었다며 ‘조국해방 전쟁’ 으로 규정하였으며, 6.25전쟁 발발일부터 정전협정이 조인된 7월27일까지 한달 간을 ‘반미 투쟁월간’ 을 정했고, 특히 6월 25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 로 기념하고 있다. 이 때 북한당국은 당, 군, 주민들로 하여금 복수모임을 갖도록 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대표들이 차례로 나서 목이 쉬도록 ‘미제 타도’ 를 외치고, 거리마다 반미를 선동하는 대형 포스터들을 내걸었다.24)

구소련 붕괴후 ‘북침설’ 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6.15선언’ 이후에도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개최되었다. 2001년 6월 26일 평안남도, 황해북

20) 『김정일 장군님과 리인모』, 1995; 김혜련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106면.

21) 「정의의 군대」, 『근로자』 1957.2, 21면.

22) 장덕호, 「파란 많은 인생: 한련락간사의 수기」, 미발간, 2003.5, 55면.

23)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교사연구회편, 『빛뿌리는 발자취』,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6, 434면.

24) 탈북인, 「내가 알아 낸 625전쟁」2006.3.6,

<http://www.nkd.or.kr/community/read.html?s=5004&no=3096>(탈북동지회).

도, 남포시 등지에서 열린 군중대회에서 지방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영웅들, 전 시공로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위치에 눈독을 들이고 100여 년 전부터 침략의 마수를 뻗쳐 온 미제가 1950년 6월 25일 전 조선을 식민지로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만들 망상 밑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 고 주장했다.²⁵⁾

셋째, 전쟁중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희생사건은 북한 측의 적개심의 중심에 있다. 북한이 전승기념관이 ‘북침전쟁’의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신천박물관은 반미선전장으로 이용되었다.²⁶⁾ 북한 측에서는 전쟁 후 1년 동안에 평양에서 15,000여 명, 강원도에서 15,000여 명, 황해도 신천군에서 35,000여 명 등 북한지역에서 백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학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미 전쟁 당시부터 주장해 왔다. 『조선전사』에서는 황해도 지역에서는 신천군 산천면에서만 4,000명을 비롯하여 황주, 재령, 봉산, 남연백군 당하동 등 모두 12만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당시 사건이 토지개혁 때 공산당에 땅을 빼앗긴 극우 반공청년들과 공산당간의 좌우 충돌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조선인민의 피 맺힌 원한이 사무쳐 있는 신천땅” 이라고 강조하면서, “력사가 흐르고 세기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미제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것” 이라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해왔다.²⁷⁾ 김정일은 1998년 11월 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일부에서 “미 제국주의자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 교활성” 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천박물관이 인민의 미국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넷째, 전쟁 결과에 대해서는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하면서 김일성을 영웅화하였다. 평양에는 ‘전승기념관’ 이 있고 ‘전승광장’ 이 있다.

김일성은 정전협정의 달성이 “조선 인민의 3년간에 걸친 영웅적 투쟁의 결과이며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역사적 승리” 라고 선언했다.²⁸⁾ 그는 1953년 10월 23일 인민군 제256 부대 장병들에게 통일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조선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그 15개 추종국가들의 방대한 무력을 때려부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대로 정

25) 『조선중앙통신』2001.6.27.

26) 탈북인, 「내가 알아 낸 625전쟁」2006.3.6,

<http://www.nkd.or.kr/community/read.html?s=5004&no=3096>(탈북동지회).

27)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2, 253-54면.

28) 『로동신문』1953.7.28.

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²⁹⁾라고 말했다. 1953년 7월 27일 미제는 판문점에 끌려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깃발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³⁰⁾면서, 북한에서는 정전체결일을 ‘제2해방의 날’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정하여 1996년 7월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특히 이 승리가 미국이라는 외래침략자에게 승리한 것으로 선전했다. 휴전협정 체결 전에 김일성은 북한주민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인민은 5천년 역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외국 침략자들과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이번 조국해방전쟁에서만 조선인민은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이하여 잔혹한 패배를 안겨주었고....국제적 권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이자 국제주의의 승리”라면서,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새롭고 선진적인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³¹⁾

1953년 7월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일성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제1급과 금별메달을 수여했다. 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보다 김일성의 백전백승의 지략과 전법,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칭송되었다.³²⁾ 2002년 6월 25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6.25전쟁이 김일성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주체전법에 의한 빛나는 승리라면서 제2의 광복을 가져다 준 민족사적사변이었고, 20세기의 군사적 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릇된 승리사관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중심권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³³⁾ 그러나 “전쟁을 일으켰다가 중국으로 도망갈 지경”에 이르렀던 김일성에게 대전략가, 영웅이라는 점은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³⁴⁾

29)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와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953.10.23.

30) 『조선중앙통신』 1998.7.27;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2, 332면.

31)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1953.7.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786-790쪽; 박태호, 『조선인민의 정정의 조국해방전쟁사』 3, 358면.

32) 박태호, 『조선인민의 정정의 조국해방전쟁사』 3, 사회과학출판사, 1983, 350-351면; 『조선중앙통신』 2001.7.27.

33)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출판사, 2002, 181면.

34)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31면.

3. 전후 ‘민족해방전쟁론’ 과 미국의 ‘전쟁책동론’

김일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고” 고 말했다.³⁵⁾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비무장지대 도발, 무장간첩 남파, 판문점사건, 버마랭군 아웅산 폭파사건 등 수많은 도발을 해왔다.

1983년 7월 북한을 방문한 재미 인사들인 선우학원, 전충림 등은 북한이 “남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전쟁준비나 남침위협이니 하는 선전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직감했다”³⁶⁾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장엽 전 로동당 비서는 북한이 항시적 준전시 상태에 있으며 전쟁분위기로 가득차 있으며, 나아가 전쟁을 신성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이며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³⁷⁾ 북한의 언론전매체를 분석해보면 황장엽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역대 군사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침위협을 고조한 적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미제의 침략론’ 을 침소봉대하였다.

이미 1950년대 진보당의 조봉암은 ‘평화통일로의 길’ 에서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북한에는 ‘조소방위협정’ 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무력통일이란 간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실현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자유당의 북진통일론을 비판했다.³⁸⁾ 이후 남한에서는 1950년대식 ‘북진통일론’ 이 사라졌지만,³⁹⁾ 아직도 북한에서는 해방전쟁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휴전 직후 김일성은 “한 나라 안에서 남조선과 북조선이 분리되어 공존할 수 있는 사상은 통일에 대한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남한을 버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주장했다.”⁴⁰⁾ 1954년 12월 23일 인민군 간부회의에서 “우리 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래일 혹은 모레 남반부를 해방하겠다고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될 것입니다”⁴¹⁾라고 했다.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새 전쟁 도발과

35)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94면.

36) 양은식 편저, 『분단을 뛰어넘어』, 힘, 1988, 369면.

37)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21면.

38) 송건호, 『분단과 민족』, 지식산업사, 1986, 322면.

39) 최익환,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허구」, 『조선통일론』, 세계, 1989, 277면.

40) 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44-145면.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42)고 평가했다.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새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62년 10월 23일 제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은 “조국의 통일은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문제가 아니며 제국주의적 속박으로부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43)라고 밝혔다. 1968년 9월 7일, “통일은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 괴뢰정권을 때려 부순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 44)고 대남 공산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미국은 35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쇼화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쇼독재자를 적극 비호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45)

6.15선언 이후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 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 주고 있다. 46)면서도 2004년 6월 25일을 맞이하여 오늘날에도 남한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배를 끝장내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 라고 선전하였다. 47)

남한에서는 전쟁을 도발한 북한이 여전히 무력노선을 고집해 전쟁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48) 반면에서 북한에서는 6.25 전쟁이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 이라는 논리가 전후에는 미국의 전쟁도발론으로 되살아났다. 북한이 미국의 전쟁책동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그들의 대남전략에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남한만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뒤에는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제국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49)

41)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23면.

42) 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159면.

43) 양성철, 『분단의 정치』, 한울, 1987, 279-280면.

44)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2009, 62면.

45) 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509-510면.

46) 「련방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 『로동신문』 2000.6.25.

47) 『조선중앙통신』 2004.6.25.

48) 김재창, 「전쟁의 회고」, 트루먼 대통령기념재단·미주리대 한국총동문회·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사), 「6.25전쟁 60주년 국제심포지움」, 2010.5.28.

49) 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145면.

1950년대 후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진을 단행하기 위한 원자전훈련과 상륙작전훈련, 대기동 훈련을 벌였다”면서,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북한 침략을 가정한 상륙작전이라고 비판했다.⁵⁰⁾ 북한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는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국부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쟁,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조정된 긴장상태와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푸에블로호 사건때 미국 측에서 군사적 보복조치를 검토하자, 북한은 1968년 1월 27일 미국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공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맞설 설 것이라고 했다.⁵¹⁾ 1976년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때도 이러한 긴장이 재연되었다.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쇼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우리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⁵²⁾ 이 무렵 남한에서 실시되었던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그들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며, 핵전쟁장비가 동원된 핵시험전쟁이라고 비판했다.⁵³⁾

1980년대 한국이 미국의 방위적 작전기지에서부터 공격적인 작전기지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은 남북대화와 교섭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이지,⁵⁴⁾ 북한의 주장처럼 전쟁도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후에도 2008년 9월 16일자 『로동신문』에서처럼 미국과 한국이 해마다 한반도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위한 시험공격작전이라고 비난했다.⁵⁵⁾

최근에는 핵개발문제로 오히려 북한에 의해 한반도위기가론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때 미국과 전쟁을 각오했다거나⁵⁶⁾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다. 2006년 3월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한 6개 국가를 ‘폭정 국가’로 지목하고 폭정의 종식을 위해 선제공격이 가

50) 허종호, 『미제의 극동정책과 조선』, 431-432면.

51) 허종호, 『미제의 극동정책과 조선』, 444-445면.

52) 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512-513면.

53) 『조선중앙통신』 2002.7.27; 허종호, 『미제의 극동정책과 조선』, 505-507면.

54) 레나토 콘스탄티노, 「조선반도-일촉즉발의 위기」, 『조선통일론』, 세계, 1989, 96-97면; 곽태환, 「남북대립의 완화를 향하여」, 같은 책, 274-275면.

55) 「미국압살정책에 전쟁억제력 강화」, 『로동신문』 2008.9.16.

56) 『조선일보』 1999.2.9.

능하다고 밝혔다며 “힘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선제공격도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라면서 “공화국은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다” 고 말했다.⁵⁷⁾ 나아가서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006년 4월 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3돌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선제공격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때까지 절대 팔짱을 끼고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⁵⁸⁾ 2008년 12월 23일에도 조선인민무력부부장 김일철 차수는 “만약 미한의 호전세력들이 전쟁도 발을 감행할 경우 조선인민군은 가차없고 사정없는 반격을 가할 것” 이라고 표했다.⁵⁹⁾

1983년 1월 중순,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페르시아 만의 산유지를 점령하려고 시도한다면 미국방성은 북한, 베트남, 소련 해안지역을 공격, 반격을 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주변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⁶⁰⁾

하지만 구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급부상한 동북아 정세 속에 “미국이 ‘북침전쟁’ 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은 커다란 오류다.” ⁶¹⁾

더욱이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강대국의 대리 전장화되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⁶²⁾ 미군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광역화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한층 더 여타 세계질서에 얽혀 있으므로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반도가 더욱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이 가상의 적에 대항해서 한국을 전략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전쟁을 회피하기보다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57) 『동아일보』 2006.3.29.

58) 『연합뉴스』 2006.4.08.

59) 『연변일보』 2008.12.24.

60)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298-299면; 한겨레사회연구소 민족분과편, 『분단에서 통일로』, 일꾼, 1988, 12면.

61)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28면.

62)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1983, 311-312면.

4. 전쟁 유산 청산과 불가침협정

1) 불가침협정 체결

“휴전의 의미는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이고, 그것이 한국전쟁의 교훈이다.”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사건에서 보듯이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도록 남북한 사이에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침협정이 요청된다. 남북통일이 장기적 과제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는 더욱 불가침협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강조한 것은 “교전일방국이며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고, 남한에서 군사통수권을 비롯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⁶⁴⁾ 북한에 평화협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군철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평화협정이 1973년부터 북미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갔다.⁶⁵⁾ 1980년 9월 미국친우봉사위원회가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 측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평화협정의 체결은 미군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했다.⁶⁶⁾ 1996년 2월 22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무장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했다.⁶⁷⁾

북한 측은 불안정한 정전협정 대신에 평화협정 제의는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이 되는 외국군의 내정간섭을 하루바삐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문제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국면을 놓기 위한 정당한 방안으로 평가했다.⁶⁸⁾ 그런데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등 실현과정에 논란이 많다. 이미 민족 공조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측이 1960년 8월 김일성이 8·15경축대회에서 처음으로 연방제 실시를 제안한 이래, 남북과 사이에는 55년 동안이나 존재하여 온 서로 다른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이 있지만 수천년

63) 김재창, 「전쟁의 회고」, 트루먼 대통령기념재단·미주리대 한국총동문회·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사), 『6.25전쟁 60주년 국제심포지움』, 2010.5.28.

64) 김혜련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274-275면.

65)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66면.

66) 미국친우봉사위원회, 「북한방문보고서」, 양은식 편저, 『분단을 뛰어넘어』, 359면.

67) 『조선중앙통신』, 1996.2.22.

68) 김혜련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276면.

을 내려오면서 형성,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공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며,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⁹⁾ 그러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방제에 대한 남한의 불신이 크다.

이에 비해 불가침 협정은 이미 남북한이 수차례 제의했던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를 봤던 내용이다.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침략포기 약속, 상호내정간섭금지, 현행 휴전협정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협정을 제의했다. 이후 1974년 9월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 회담을 통해 북한 측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의 수락을 촉구했다.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 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 을⁷⁰⁾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남북연방제 실시, 평화협정체결, 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북한 측이 전후 내세운 남북간, 혹은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는 간단히 해결되지 못할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미 1955년 8월 14일 해방 10주년 경축사에서 김일성은 남북군축, 불가침선언과 함께 외국군 철수를 제안했다.⁷¹⁾ 1962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회의에서 남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군 철퇴, 남북군대감축 등을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통일의 근본장애와 난관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 내정간섭에 있다” .고 주장해왔다.⁷²⁾ 1993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통과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에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이 때 발표된 ‘4개 대남요구사항’ 에서 남한 정부는 미군을 철수시킬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외국군대와 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중지할 것,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날 것 등을 분명히 요구했다.⁷³⁾

69) 『로동신문』 2000. 6. 2 5.

70) 김명기, 「불가침조약의 개념과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 검토」, 국토통일원, 1990.12, 22-24면.

71)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18-2, 2009, 65-66면; 김혜련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155면, 200면;

72) 김혜련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155면.

73) 『로동신문』 1993.4.8.

북한 측은 남북한 불가침선언과 대미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1984년 1월 10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와 국회에 대미평화협정 체결제외와 남북한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이어서 1990년 10월 17일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연형묵 총리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제안하면서, 남한에서 핵무기와 미국 군대를 철수를 요구했다.

2002년 10월 25일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선전 포고” 라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고 제안하였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⁷⁴⁾

미국에서도 북핵폐기와 불가침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은 2003년 11월 14일 “북미 불가침조약이 필요하다.” 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북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실제로 침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⁷⁵⁾ 2003년 12월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종식을 조건으로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딘 후보는 북한 핵문제는 이같은 불가침협정 체결이 포함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⁷⁶⁾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불가침협정보다는 남북불가침협정 체결과 이를 미중일러 등의 보장론이 더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만으로는 준수되지 않았던 약점을 보완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해온 유엔을 통한 국제보장⁷⁷⁾의 뜻을 이으면서 4대국 보장론이 형식적으로 외세의존적으로 보이나,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다.⁷⁸⁾

74) 『조선중앙통신』 2002.10.25.

75) 「北·美불가침조약 필요」 盧대통령, 클린턴과 오찬, 『서울신문』 2003.11.15.

76) 「북핵 폐기-불가침협정 일괄타결을」..美 민주당 대선후보 딘, 『세계일보』 2003.12.15.

77)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가남사, 1984, 239-240면.

78) 김홍명, 『분단의 우상』, 사계절, 1993, 193면.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시 남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온다면 평화보장이 아니라 위협보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⁷⁹⁾ 반면, 미군철수와 군축 문제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는 남한 정부가 제시한 ‘불가침조약’을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면서 남한에 미군을 그대로 두고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⁸⁰⁾

그들이 미군 주둔 아래 불가침협정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먼저 전후 60년이 흐르면 서도 남한의 성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의 미국식민지체제 운운하는 오류를 벗어나서 미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북한의 인식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도 미군의 역할변화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한다.

1968년 ‘국방백서’에 이미 ‘국방의 주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해 국방비 내역을 보면, 급여 45.6%, 급식 26.4%, 피복비 8.0% 등 개인유지비 80.0%, 부대유지비 16.6%, 기타 정보 0.8%, 연구발전 및 시험 0.1%, 교육 5.1%, 예비군 0.3%, 대간첩작전 0.5% 등⁸¹⁾으로 군비 증강을 할 여지가 없었다. 한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나라에 속하기도 했지만, 이제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으로 상징되듯이,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무역규모 세계 12위, 선박 및 반도체기억소자의 생산 및 수출 세계 1위,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수 7위, 정보화 지수 세계 6위 등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로 등장하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었다. C4I 전력화, 군위성통신체계 전력화 등 본격적으로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첨단과학군’을 표방하면서도 아직 육해공 3군의 균형 잡힌 병력과 장비를 갖춘 국군을 건설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국군의 군사력은 세계 12~13위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8월 하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당장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I don't see them, frankly, as an immediate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확산 같은 심각한 위협이 있지만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그들의 경제가 비틀거리면서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⁸²⁾ 이를 미군 감축을 위한 수사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남한의 경제력 우위에 따라 한국의 군사비

79) 정용석, 「‘불가침선언’과 남북한 갈등구조」, 402-403면.

80)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로정』, 평양출판사, 2008, 277면.

81) 『국방백서』, 1968, 13면, 149면.

82) “Rumsfeld: S. Korea Need not Fear North”, *Associated Press*, August 28, 2006.

규모가 훨씬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 외에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됨으로써 전쟁, 빈곤, 독재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국민들은 이전보다는 자주적인 의식이 강해졌다. 이런 의식을 반영해서 1990년대 초부터 한국방위에 대한 미군의 역할을 ‘주도(a leading role)’에서 ‘지원(a supporting role)’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써 연합야전사령부 해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이양 등이 실행되었다. 휴전 후 계속 주둔해 온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대북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인 김재창 장군은 북한측이 남한에서 미군을 빼고 한국군만 남게 될 경우 “싸웠을 때 확실하게 패배한다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기습을 감행하면 더더욱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억지될 수 없다면서 전쟁을 억지하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주둔이 그러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³⁾

그런데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성장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차 한반도방위에서 지역방위로 바뀌고 있다. 1977년 5월, 베시(John W. Vessey, Jr.) 주한유엔군 사령관은 미 지상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유일한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⁸⁴⁾ 하지만 최근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2003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2008년 8월 한미 양국의 정상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동맹의 임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의 해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조치없이 남북한 사이에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 할 때, 한계가 분명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던 햇볕정책 속에서도 2차례의 서해교전이 일어났다.

83)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군사편찬연구소, 2008, 280면.

84) 『조선일보』 1977.5.25.

과거를 문제삼지 말고, 미래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2001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과 관련하여 이미 논란이 되었다. 당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과거사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남북간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에 담겨있는 아픔을 새겨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 이전에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전력의 후방 재배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조건없는 송환 약속 등을 전향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⁸⁵⁾

전쟁발발 6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는 전쟁의 유산 청산을 시도하면서 중단된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귀환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납북자의 경우, 이미 고령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고, 미귀환 국군포로들도 이미 80세를 넘는 고령들이다. 때문에 이전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방식이 아니라, 납북자·국군포로·양민희생자 문제 등을 일괄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 많게는 20만 명까지 주장되었지만,⁸⁶⁾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서 여러 명단 가운데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종합 정리한 인원이 96,013명이다. 피랍 대상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문화계, 의료계, 금융계, 실업계 등 유명인사는 물론 기술자, 회사원, 농민, 학생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헌한 자 및 반공단체에 소속되었던 민간인은 납치 1순위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면서 강제 군사 동원을 위한 납치도 광범위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기술자 노무자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남한에서 대거 끌어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피랍자 가운데 의용군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사전조사에 의한 납치라면, 의용군들은 남한에서 전선으로 강제로 끌려간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쟁중 북한군에 끌려간 의용군의 규모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⁸⁷⁾ 북한 자료에 따르면 의용군의 규모가 과장되어 있다. 전쟁 당시 북한군 제12사단 문화부중대장의 일지에도 40만 명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조국해방전쟁사』와 『조선전사』 등에서도 40만 명 수준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1950년 8월 15일 축하

85) 「김정일답방」 국회 이념논쟁 격돌, 『조선일보』 2001.2.13.

86) 『조선일보』 1951.12.6.

87)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1976, p.33.

에서 김일성은 남한지역에서 벌써 40여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의용군과 빨치산에 참가하고 있다고 허풍을 떨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0만 명은 남한지역에서 ‘전선탄원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된 인원이었다.⁸⁸⁾ 그러나 내부적으로 1950년 9월말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에서 동원된 병력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밝혔다.⁸⁹⁾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출신 의용군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다행히 중국 연구자에 의해 1953년 12월 초 주 북한주재 소련 대리대사가 본국 외무부에 보낸 문서가 발굴됨으로써, 북한에는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가 13,094명과 함께, 의용군 42,262명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⁹⁰⁾ 국군포로의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된 것을 감안한다면 의용군 규모도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을 모두 자진 월북자라고 하면서,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입대한 자들이거나 남한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으로 의거한 사람들이라면서 주장하고 있다.⁹¹⁾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시에 북한 측의 대상자 중 의용군 출신이 많았는데, 2006년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남측 기자가 “전쟁 통에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삼아 북측이 취재와 송출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자진 입대한 의용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⁹²⁾

하지만 의용군들은 자발적으로 입대하거나 월북한 경우 보다는 강제적인 요소가 많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휴전협상에서 의용군은 애국자라면서 이들을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⁹³⁾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전쟁시기 끌려간 후 60년이 다 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간 동생 강신철을 애타게 찾고 있는 강선웅씨는 “동생을 만나진 못하

88)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pp.371-372. 빨치산 종군기자였던 이태도 대전이 북에서 40만 명이 남한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이태, 『남부군 비극의 사령관 이현상』, 학원사, 1990, pp.80-81), 이러한 오류 탓이다.

89) 『로동신문』, 1950. 8. 16;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1950. 9. 29, 「소련 극비 외교문서」 4, p.72; 「제12보병사단제32연대제2대대문화부중대장의 일지」, 1950. 11. 7-1951. 2. 1,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167, 169면;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역사문제연구』 6, 200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2권, 1979, p.29. 따라서 1950년 7월과 8월 사이에 10만 명 내외가 납북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조철, 『죽음의 세월』, 성봉각, 1964, p.39).

90) 「주 북한 소련 대리대사 수주달예프가 몰로토프 외상에게」, 1953. 12. 2,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p.619; 『연합통신』 2005. 6. 16.

91) 『로동신문』 2006.9.5.

92) 「1년반만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내일신문』 2009.9.25.

93)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p.574.

더라도 생사여부 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 며 “쫓이고 쫓인 이산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 이라고 울음을 터뜨렸다.⁹⁴⁾

한편,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 발표되면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상봉 사업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귀환국 군포로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6·25전쟁의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는 휴전협상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고, 휴전 후에도 북한 측은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 고 반박하였다. 1998년 6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는 전쟁 당시 국군포로를 정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한의 반인민적 통치에 항거,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해 온 이전 국군장병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 이라고 강조하였다.⁹⁵⁾ 그 후에도 “단지 북한으로 망명했거나 불명예스럽게 괴뢰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만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면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2001년 2월 제3차 이산가족 상봉시 북한 방송에서는 “전쟁시기 공화국으로 의거한 손원호와 김재덕이 가족과 만났다” 고 공개하였다.⁹⁶⁾ 즉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들이 모두 북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잔류한 것처럼 거듭 주장하였다.

아직까지 북한 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신천학살사건’ 으로 대표되는 전쟁중 북한지역 민간인희생자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에 내버려두지 말고, 재단법인의 목적이 과거의 강제노동자와 나치 시대 불법 피해에 대한 급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⁹⁷⁾ 2000년 8월 독일정부 주도로 기업들과 함께 나치 치하 강제노동을 했던 억류자들에게 대한 배상기금으로 ‘기억, 책임, 및 미래재단(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EVZ)’ 처럼 재단을 설립하여 전쟁중 북한에서 희생된 민간인피해자 조사와 위령비 설치, 보상 조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4) 『한국일보』2001.8.13.

95) 『동아일보』, 1998. 6. 24.

96) 『동아일보』, 2000. 6. 30 ; 『한국일보』, 2001. 2. 28.

9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2, 2008, p.281.

5. 맺음말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이 미국의 면밀하고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남한을 해방하려 했다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물리쳤다는 승리사관으로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동력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북한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은 북한체제 유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북한 측의 전쟁관련 문서공개, 전쟁사에 대한 학술교류, 참전자들의 화해적인 방문 등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2001년 3월 초에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인민대학습당에서 일제의 조선 강점 자료전시회와 남북 역사학자들의 일제 식민통치 만행을 규탄하는 공동학술회의가 열려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지만, 6.25전쟁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한 탈북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기 전까지는⁹⁸⁾ 그들의 6.25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반미투쟁월간’에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에서는 김일성의 남침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한국전쟁 관련 문서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국군의 문서 공개 등은 러시아 자료에 이어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에 있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교환가능한 포로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재단’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가 미국의 북침강조,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이유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강대국이 지원하는 바람직한 체제일 것이다. 물론 불가침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98) 한영진, 「유치원부터 ‘반미’ 교육… 귀에 못 박혀」, 2006.6.2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24158>.